아이낳기 좋은 광주,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성과

市, 지원정책 지속 확대…전국 유일 6개월 연속 증가
출생육아수당 확대 등 저출산 시대 롤모델로 떠올라

광주시가 전국에서 6개월 연속 '출생아 수 증가'라는 기록을 세우는 등 '아이 낳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전국 광역·기초단체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기준 광주 출생아 수는 모두 4천14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377명) 증가했다. 광주 출생아 수 6개월 연속 증가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다.

올해 출생아수는 ▲1월 732명(전년 동월 대비 5.4% 증가) ▲2월 680명(〃11.1%〃) ▲3월 691명(〃4.2%〃) ▲4월 666명(〃8.4%〃) ▲5월 683명(〃13.1%〃) ▲6월 690명(〃18.4%〃) 등 꾸준한 증감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6월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7명 증가(18.4%)해 전국 최고치를 보였다. 광주시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1분기 0.96, 2분기 0.92로 전년 대비 0.12명 증가했으며, 전국(1분기 0.88, 2분기 0.82)보다 상회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최근 5년간 광주시 합계출산율을 보면 2017년 1.05를 마지막으로 ▲2018년 0.97 ▲2019년 0.91 ▲2020년 0.81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최근 다시 반등했다.

이는 광주시가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 추진 중인 '6단계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이 주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광주시는 민선 7기 이후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편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여성가족재단 기능의 강화와 광주아이키움 플랫폼 구축 등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또 민·관·학 협업조직 구성, 정책개발 TF 운영, 시민 맞춤형 정책 마련하고, 만남에서 부터 결혼·임신·출생·육아돌봄·일생활균형까지 이르는 생애주기별 정책으로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 만 35세 이상 고령임산부 증가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도 이뤄졌다. 광주시 1년 이상 거주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소진자에 한해 난임시술비를 매년 최대 4회 추가 지원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953쌍이 임신에 성공했다.

광주시는 올해 8월까지 출생축하금(4천900명, 100만원)과 육아수당(10만9천812명, 월 20만원 24개월) 등 총 269억원을 지원했다.

전국 최초로 코로나 감염병에 취약한 임신부(3천579명)와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785명)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총 5억9천4백만원을 지급했다.

광주시는 향후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지속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출생아별 100만원 지급됐던 출생육아 수당도 둘째 150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으로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생아수의 꾸준한 증감율을 보이고 있어 최근 청와대에 정책 설명을 한 바 있다"면서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정책의 성과로 저출산 시대에 전국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오승지기자

金지사, 도정질의 답변 김영록 전남지사가 6일 전남도의회 제35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데이터센터 클러스트 산업 육성 전남지역 대선 공약으로 추진을"

우승희 도의원, 도정질의서 '신재생에너지 여건 활용' 주장

전남지역 신재생에너지 여건을 활용한 데이터센터 클러스트 산업 육성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우승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6일 열린 제3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1위인 전남의 특성을 살린 '데이터센터 클러스트 산업' 육성과 대선 공약화를 촉구했다.

데이터센터는 컴퓨터 시스템과 통신장비, 저장장치 등이 설치된 시설로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유통시키는 핵심 인프라다. 4차 산업혁명 등 폭증하는 데이터 수용을 위해 중요도가 높고, 대규모 전력과 발생열을 식힐 여건도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전남은 바람과 햇볕 등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이 전국 1위며, 수도권에 비해 부지확보 비용이 저렴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센터 건립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우 의원은 "그동안 태양광 등 사업이 기업이익 중심으로 추진돼 주민은 농지를 빼앗기고 이익은 외부로 유출됐다"며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자원인 바람과 햇볕은 공유 자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이익 또한 지역과 주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전기를 전남지역에만 공급한다면 탄소세·RE100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전남으로 이전해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전남의 산업생태계 다양화와 청년들의 지역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인재가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구조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 의원은 "의료취약지역인 전남이지만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분야 인력이 전남지역에서 근무하려 하지 않는다"면서 "의료분야 등 우리 전남지역이 취약하거나 청년들이 기피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정착을 돕는 시스템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광주교대 교육감 추천 입학제처럼 전남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이 지역대학에 진학해 전남 기업 취업과 전남정착을 약속한다면,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후성기자

광주시, 추석맞이 복지일자리 생산품 장터 운영

내일부터 이틀간 시청…수제청·천연비누 등 114개 품목 판매

광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복지 일자리 생산품 홍보와 판매를 위한 장터를 운영한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청 행정동 앞에서 복지일자리 생산품 홍보와 판매를 위한 '희망을 구입하고 행복을 담아가는 신나는 장터'를 개최한다.

이번 판매장터는 지역 복지일자리 생산품 홍보를 비롯해 사회 재기를 꿈꾸는 자활근로자, 노인일자리 참여자, 자립을 꿈꾸는 지적 장애인 등에게 근로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판매 상품은 지역자활센터와 노인·장애인 일자리에서 생산된 총 114개. 품목으로는 ▲수제청, 잼, 빵·쿠키, 커피·차, 누룽지, 어묵, 참·들기름, 김치 등 수제 먹거리 ▲천연비누, 세제, 수세미, 도마 등 생필품 ▲파우치, 키링, 손가방, 지갑, 벨트 등 공예품 등이다.

이날 현장에선 바로 구매하거나 배송 예약도 받는다.

류미수 시 사회복지과장은 "광주시는 복지일자리 생산품 전시판매장을 설치·운영해 사회취약 계층의 생산품 인지도를 높이고, 공공기관의 복지일자리 생산품 공공구매를 촉진하는 등 매출 증대와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이웃과 주변을 생각하는 착한 소비, 선한 영향력으로 저소득층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승지기자

전남도, 전국 첫 교통안전서약운동 1만명 돌파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 역량 집중

전남도는 6일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실시한 온라인 '교통안전서약운동'에 서명한 도민이 3개월만에 1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교통안전서약운동'은 ▲도시지역 제한속도 30-50㎞ 이하로 운행하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하기 ▲급정차·급출발 안하기 ▲불법 주정차 하지 않기 등 교통안전을 위해 실천할 10개 항목 중 5개 이상을 지키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는 전남도의 교통문화홍보 캠페인이다.

지난해 전남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281명이다. 이 중 70%가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분석됨에 따라 전남도가 안전운전 습관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해 마련한 특수시책이다.

올 들어 8월 말 현재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52명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명(13.1%) 줄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도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홍보·교육을 활발하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약운동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재영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교통안전서약운동은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범도민 실천 운동"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캠페인과 취약구간 안전시설 확충 등 교통안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약운동은 전남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도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수시로 프로모션을 진행해 상품권도 증정한다. /김재정기자